

전북 사회 전반 이재명 지지 확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국노총 건설인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등 6개 단체... 노동·복지·산업·문화 등 분야별 지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 사회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하루 동안에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6개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동, 복지, 산업, 농축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지를 표명하면서 전북 사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인노조 전북 소속 조합원 300여명 "산업안전·노동 존중 실현할 후보"

한국노총 전국건설인노조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이재명 후보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지지에 나섰다.

이들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체계 정비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그리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간의 정치적 행보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매일 같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런 변화를 이끌 유일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전북청년경제인불자회 회원 100여명 "불교문화 정책 유일 제시"

(사)전북청년경제인불자회(회장 박용섭) 회원 100여 명은 "이 후보는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불교문화에 관한 공약을 내세운 인물"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불교문화가 가진 사회통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불교 관련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확대 △사부담 완화 △불교문화 교류사업의 민간 외교적 확대 지원 △불교계 문화 행사의 제도적 뒷받침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점이 주목됐다"고 밝혔다.



1 한국노총 전국건설인노조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 회원들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4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200여명 "요양 현장 이해한 실무형 후보"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이승현) 회원 200여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사자의 근로권, 기관의 운영권, 이용자의 선택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낼 책임자"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행정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을 실천해 온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전북IT산업협회 회원 300여명 "디지털 전환과 균형발전 이끌 책임자"

전북IT산업협회(회장 라정진)회원 300여 명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후보가 이재명"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협회는 "이 후보는 △AI 100조 원 투자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민 AI 플랫폼 추진 △디지털 바이오·스마트 농업·핀테크 등 신산업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전북의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전북지회 회원 200여명 "한우산업 살릴 유일한 대인"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회장 정운섭) 회원 200여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우산업이 수입육 확대로 생존 위기에 처한 지금, 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추진력과 대안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수입육 확산, 사료값 급등, 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 후보는 축산업 탄소중립

대책과 축산경영안정 대책을 명확하게 공약했다"고 밝혔다.

▲한예총 전북자치도연합회 "문화가 나라의 힘... 예술정책 믿는다"

(사)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최무연)는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인물"이라며 지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참담한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며, "진정한 국민통합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총 회장단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을 세계에 알릴 대령으로 이재명을 믿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추경으로 지역 활력 높인다

전북자치도, 올 첫 추경으로 총 786억9000만원 편성
소상공인·전통시장·창업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으로 총 786억9,000만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643억원 대비 144억원(22%) 증가한 규모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북도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0억원 추가 확대해 전체 규모를 약 1조3,3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위축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퇴직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도 기존보다 2배 이상한 월 2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9개 시장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시장축제를 지원하고, 화재·재해 예방시설 개선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조금 예산도 35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약 877억원 규

모의 신규 투자와 13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32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기업 유치와 밸류체인 완성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혁신 선도 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는 12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해외규격인 증 확대, 관세 대응 바꾸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작년 6월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청년도양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산업별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북형 벤처펀드에 41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올해 말까지 24개 펀드, 약 9,000억원을 조성하여 민선 8기 내 1조원 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벤처펀드는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중소·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과 스케일업, 전북 투자생태계의 유동성 공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정읍시민들 "주거단지에서 쓰레기 발전소 결사 반대"

건강권 이유 들며 백지화 주장... 정읍 영파동에 하루 552t 규모 SRF 화력발전소 건립 예정



정읍시 폐목질계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읍시에 추진 중인 폐목재 고형연료(SRF)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시설이 왜 정읍에는 허용되느냐"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읍시 폐목질계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예정인 정읍그린파워(주)의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 건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읍 시민 20여 명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정삼철 정읍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하루 552톤의 폐목재로 만든 고형연료(Bio-SRF)를 소각해 21.9MW의 전기와 하루 480톤의 증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소각시설이다.

우용태 대책위원장과 정삼철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시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로 법적으로 금지된 시설"이라며 "정읍시민에게는 왜 이런 유해시설을 떠넘기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폐목재 고형연료는 중금속, 다이옥신 등 발암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위험한 연료"라며 "정읍 일반산업단지는 이미 환경오염이 포화상태인 지역으로, SRF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대책위는 그동안 정읍천 둔치와 정읍시청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열고,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5,8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시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택시 차량에도 반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처럼 대규모 소각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주민 동의 조작 의혹, 절차 위법 등과 관련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 시 사업자의 적극적 대책 마련' 조항을 근거로,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읍시에는 "지역 내 대기환경 총량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정읍제1산단의 환경포화도를 재평가해 환경용량을 넘는 신규 오염시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며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강력히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읍 폐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대응과 행정절차 처리 방향에 따라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당선대위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은 유권자 모욕"

대선후보 배우자 TV토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이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의 회화화이자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선을 오락처럼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후보의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배우자 토론은 사생활 문제로 논점을 흐리려는 저급한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조국혁신위, 14개 시군 순회 '골목골목 경청 투어'

전북조국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두 발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당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각 지역 당원들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검찰 해체·정권 교체에 대한 정책 구상을 직접 듣고, 자신들의 생활 속 요구를 나누고 있다. 거창한 무대 대신, 생활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다.

지난 18일 익산역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19일 부안군, 20일 완주군까지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해야"

전국교수노조 등 7개 단체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지금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책임 방기와 고등교육재정의 부족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 오늘날 대학에서 그 심각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이다.

이들은 현재 18세 학령인구가 약 44만 명 수준이며, 향후 20년 내에 절반 수준인 약 22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대학 구조조정과 폐교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그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실명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고, 대학

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서열화 해소, 교육 불평등 구조 개혁, AI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대학의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장애인 유권자 대상 선거교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안전한 투표, 즐거운 선거교실(이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교실은 선거의 4가지 원칙, 투표하기 전 기억하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투표소와 유사하게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투표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거교실에 참여한 장애인 유권자는 "평소 투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직접 투표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아 이번 대통령선거는 투표소에서 쉽게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